

# “트럼프, 對中 무역합의문 초안 마련 지시”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분쟁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길 희망하고 있으며, 미 관리들에게 잠재적인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이러한 타결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통화 후 “매우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으며 트위터에도 “무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여러 각료들에게 잠재적인 타협

외신 “무역 분쟁 관련, 이달 내 타결 원해” 인용 보도

소식통 “여러 부처가 작성 돌입”...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안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여러 부처들이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말해 격화돼온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휴전에 돌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 통화는 6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모두 북한 문제 및 무역 문제에 있어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별개로 열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더 자주 직접 대화를 갖는 것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또 1일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가진 중간선거 지지 유세에서도

“그(시진핑 주석)와의 논의가 잘 진전되고 있다. 그들(중국)은 타협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제까지 중국이 거부해온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한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미-중 관계는 무역 문제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 등으로 최근 격렬히 악화됐었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앞으로 50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로 관세 부과를 확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달 말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분쟁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사진은 작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나란히 한 시진핑 국가주석. /뉴시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정운현(59·사진) 상지대 초빙교수가 내정됐다. 정 비서실장 내정자는 청와대 검증과 통과해 조만간 비서실장직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함양 출신인 정 내정자는 대구고, 경북대 문헌정보학과를 거쳐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20여년간 기자로 재직하면서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등도 역임했다.

정 내정자는 ‘친일파는 살아있다’, ‘실록 군인 박정희’, ‘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 ‘물려있는 한국 현대사’, ‘조선의 딸, 충을 들다’, ‘안중근가 사람들’ 등 20여권의 역사서를 쓴 저술가 이력도 갖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정 내정자가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에서 다져온 경험과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소통의 폭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자리에 앉으시죠”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단 워크숍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日 강제징용 대응 단호히”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어떻게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총리 주재 각 부처 회의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즉각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하고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조용하다”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 의원은 “정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이 우리 정부를 더 우습게보고 더 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일본하고 과연 이런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제관계에서 이웃한 나라들끼리 관계는 여러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 나라의 존재 이유에 관한 이런 근본적인 도전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한일관계가 무를 칼로 베듯이 할 수는 없다”라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모을 때 저희들은 단호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 “현명관 부인은 최순실 측근” 김현권 의원, 2심도 패소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미사회장 부인이 ‘최순실 3인방’이라고 주장했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 2일 현 전 회장 부인 전 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용 자체에 일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국회의원이더라도 무조건적인 면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나 인터뷰가 본회의 발인 직전이나 직후 이뤄졌다면 면책권이 있다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3~4일 전 보도자료가 나왔고, 본회의 이후 인터뷰에서 추가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뉴시스

## 자유한국당 “내년 예산 20조 삭감”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임신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안에서 남북경협 예산 5000억원 등 20조원 삭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죽어가는 경제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방향을 바꿔 나가게 해야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산모가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을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출산 시 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세까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

당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학생을 상대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청소년 내일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역시 3년 안에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남북경협예산 5000억원 등 내년도 예산 20조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장학성의 소득주도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 감사원, 213개 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발표... 전북도 A등급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213개 기관의 지난해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한 결과 교육부·국도교통부·통일부 등 모두 37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13개 기관을 10개 심사군으로 구분하고, 상반기(2~5월)·하반기(6~10월) 현지실사를 통해 지난해 감사활동과 실적을 평가했다. 기준은

감사조직·인력운영 독립성, 감사 실시 적정성, 감사 성과, 감사 지적사항 집행도 등 4개 분야 27개 지표다. 이를 토대로 산출된 절대점수와 심사군 내 순위를 감안해 등급을 부여했다.

심사 결과 A등급을 받은 곳은 ▲교육부·국도교통부·통일부·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병무청·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충청남도 등 37개 기관 감사실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